이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www.cd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제169호

ChungNam Report

2015. 5. 28.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 진 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sryu@cnu.ac.kr

본 연구는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그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CONTENTS

〈 요 약 〉
1. 논의의 필요성
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요 약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이라는 충남 복지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생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충남도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임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긴급지원제도, 자활사업의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자원연계의 부족,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정립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문제, 복지수요자의 시군별 분포의 불균형 심화,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내실화 및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개별급여체제 전환에 따른 운영효율성 제고,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수립, 셋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활성화, 넷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다섯째, 시군별 복지수요의 격차에 대한 상생적 지원방안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충남연구원

01 논의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에 전체가구 대상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4.6%로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인 가구, 취업자 없는 근로연령층 가구, 65세 이상 노인층 등의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1)]

◉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복지환경의 변화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사회적 위험요인(일자리부족, 노후생활보장의 미흡, 교육비 부담 및 주거 불안 등)으로 미래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르게 한부모가구, 1인가구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위기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층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복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이라는 충남 복지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이며, 충남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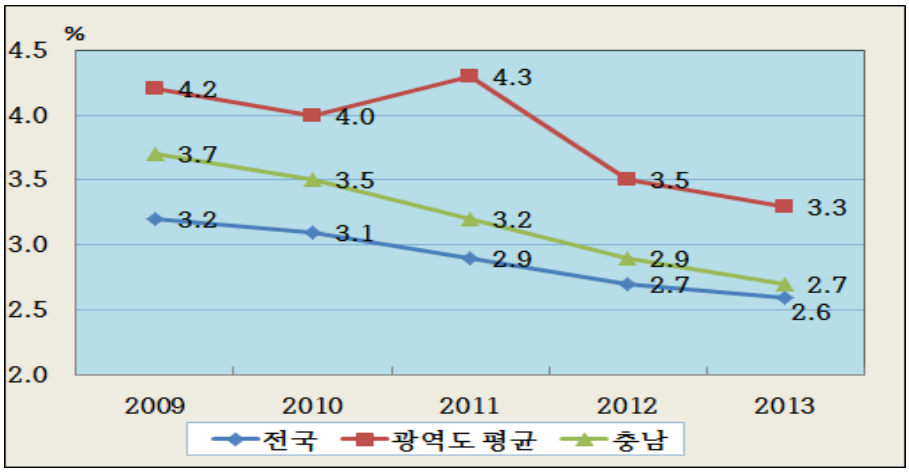
1)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p. 19.

02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주요 추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

- 5종(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지원(기초생활보장급여)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 54,799명을 대상으로 1,521억원을 지급하였음(재원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임)
- 〈그림 1〉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충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7%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황을 통해 충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광역도의 평균 3.3%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추이

◉ 둘째, 긴급지원사업의 추진

- 질병,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긴급지원으로 위기 상황 해결 및 빈곤으로의 전락을 사전예방(선지원 후처리 원칙)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 지원(단, 생계, 주거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2014년 9월말 현재, 3,422가구를 대상으로 2,535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 셋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

- 단전·단수·가스 체납자 및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등 잠재적 위기가구의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 긴급지원, 수급자 선정, 민간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

◉ 넷째, 자활사업의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자립·자활능력을 향상하여 탈빈곤 목적으로 자활사업 추진
-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광역자활센터설치(2014), 지역자활센터 14개소(15개 시·군), 자활사업단 114개소, 자활기업 71개소,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7/6개소를 운용 중에 있음. 그리고 2014년 9월말 기준,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은 2,208명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등
-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입법예고, 다문화 가정 지원 등

◉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직으로서 행복키움지원단의 운영

- 행복키움지원단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서 제시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충남형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구축한 전달체계임. 이는 2012년 상반기에 시·군에 설치하였으며, 복지자원개발 및 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체계화를 전담하는 조직임

-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해소, 자활·자립지원, 상시 상담채널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복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
- 시군 행복키움지원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고 있음(2014년 15개 시·군 총 운영비는 325,446천 원이며, 이 중에서 시·군비가 227,812천 원, 도비 지원은 97,634천 원임)

◉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복지사각지대계층의 생활보장에 대한 충남 자체사업이 미흡함

- 충남 저소득층 정책 대부분은 법정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사각지대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독자적인 충남 자체사업은 미흡한 실정임(참고로 지방복지재정의 경직성 및 부담가중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음)

◉ 둘째,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정립 및 지역자활센터간의 네트워크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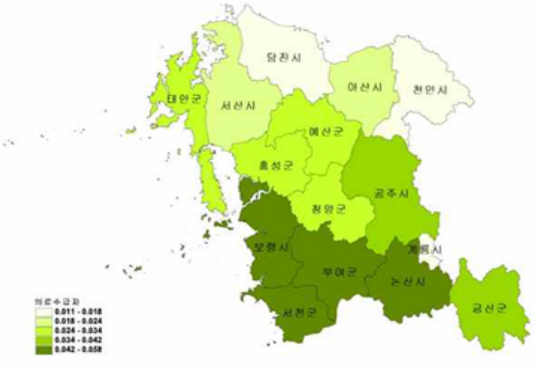
- 2014년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된 관계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정립 및 사업효과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실정임
- 광역단위에서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

◉ 셋째, 복지수요의 지역 간 격차의 심화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수요자(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자 등)의 분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과다 분포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의 한계
- 법정복지사업의 재원분담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자 분포에 따른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부담의 격차 및 그에 따른 타 사업수행의 어려움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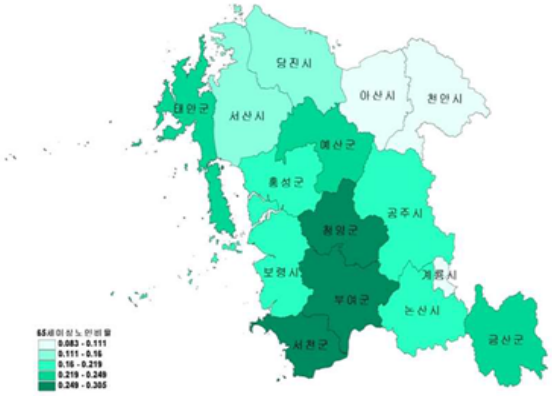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분포]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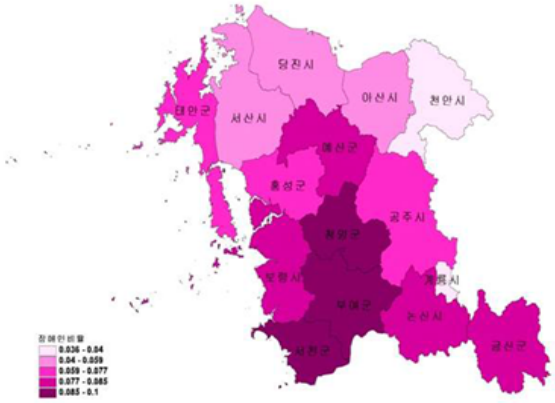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분포]



[장애인 비율 분포]



자료: 충청남도(20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림 2〉 시군별 복지수요자의 분포

◉ 넷째, 행복키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시스템 구축 미흡

- 행복키움지원단의 구축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조직적 틀이 마련되었고, 서비스의 연계와 자원관리의 체계화에 기여함. 그러나 사례관리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기능 강화,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광역수준에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의 미흡한 실정임
- 광역단위에서 전문사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검토
  (예, 타 시도의 경우, 복지재단에서 전문사례관리지원기능 수행)

03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에서 충남은 기초수급자의 감소,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의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지원체계로서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은 주로 법적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직결되어 있고, 주요 정책의 집행은 시·군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그 결과, 충남도의 역할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거나 자체사업을 기획하기란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기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목적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사업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위한 충남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년 7월 시행)은 과거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서 중위소득과 연동된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가 이루어지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일선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급여별 주무부처가 변경되고(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충남도의 경우 주거급여의 업무가 건축도시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임
- 따라서 충남도 내에 가칭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TF'를 설치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도민 홍보 및 교육,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14.12.30)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5.3.2.)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능력 강화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지원의 신청접수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변경
- 특히,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의 기준(예,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작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복지사각지대의 안전망 역할 및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기가정의 발굴-지원내용간의 연계'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함
-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자원 연계에 초점을 두어야 함. 특히 저소득층 생활보장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접근에 기초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충남은 자체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정책적 개입을 집중해야할 것임

◉ 셋째, 통합사례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수립

- 행복키움지원단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복합적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신분보장의 문제,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지원체계 미흡, 연계할 서비스 및 자원의 부족, 일부 지역에서의 지역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자원발굴 및 자원동원을 통한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강화하고, 도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타 시도의 경험을 기초로 '복지재단 설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전문지원체계'를 구축, 또는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전문지원단' 설치 혹은 '민간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활성화

-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제 운영지원(2014년 28개소, 도비 30%+시군비 70%) 및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국비 50%+시군비 50%) 등에 대한 도비 지원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빈곤지역 및 취약지역 재생프로젝트 전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정주환경개선, 복지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

재생프로젝트의 전개로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한계마을(인구고령화 및 과소화 마을)에 대한 맞춤형(재편, 재생 등) 정책추진[2]과 함께 주민참여 및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추진과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 다섯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임. 기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도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 충남의 경우,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자의 지역별 분포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수요자의 분포의 지역별 격차심화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충남의 한계마을 정책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영재(2014),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 정책 도입해야!, 충남리포트 제101호〉 참조

04 결론 및 정책제언

◉ 충남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초수급자의 감소,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의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지방복지재정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그에 맞게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 할 수 있음

◉ 충남 저소득정책은 크게 복지사각지대발굴에 따른 자원연계의 부족,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정립, 복지수요자의 지역 간 분포에서의 격차 심화,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향후 복지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 개별급여체제 전환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구축 ②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지원체계의 수립 ③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활성화 ④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⑤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방안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 충남의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이에 기초한 개선방안의 마련, 그리고 지역별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충남도의 복지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중심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42-821-6475, jsryu@cnu.ac.kr

※ 본 연구는 '저소득 · 취약계층의 문제와 충남의 대응방안(2015)' 발표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참 고 자 료 ◆

관계부처합동,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

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4.

조영재,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충남리포트 제101호, 2014.

충남도청,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와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